

# 연금시장리뷰

## 경제현안

동향: 국내외 경제 및 금융시장

산업 이슈: 웰니스 서비스 산업 동향

경제 이슈: 창조경제의 성공은 창조산업 육성부터

## 퇴직연금

이슈: 고령화 사회에 대한 인식과 대응

- 고령화 사회, 6년 더 일하고 싶다

## 세심록

감정 온도를 낮춰라

## Book Review

지금 당장 이 불황을 끝내라 (End this depression now)



본 자료는 기관 및 개인투자자를 위해 작성된 현대증권과 현대경제연구원이 공동발행하는 보고서로 퇴직연금 관련 이슈 및 경제현안에 대한 설명자료입니다. 본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인용 또는 전재하시기 위해서는 본 연구원의 허락을 얻어야 하며, 보고서 내용에 대한 문의는 우측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 동향: 국내외 경제 및 금융시장

○ 실물 동향: 한국은행, 6월 기준금리 2.50%로 동결

- 한국은행은 13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6월 기준금리를 2.50%로 동결하고, 경제성장률도 기존 4월 전망치 2.6%에서 0.2%p 올린 2.8%로 상향 조정함
  - 기준금리 동결은 정부가 추가경정예산 등 경기부양 정책을 진행되고 있어 정책 효과를 지켜봐야 하고 한국경제가 미약하나마 하반기 회복세로 돌아설 것이라고 판단
  - 한편, 한은은 지난 4월의 2013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인 2.6%를 7월 전망에서는 0.2%p 상향 조정하여 2.8%로 높임
- 하반기 경기 전망 상향에도 불구하고 선진국 양적완화 조기 종료, 국내 부동산 시장 부진 지속 등으로 경제 상황에 대한 우려는 재차 커질 수 있음

○ 금융 동향: 선진국 양적완화 조기 종료 우려로 국내 금융시장도 동반 하락

- 선진국 양적완화 조기 종료에 대한 우려와 한국은행의 금리 동결 등으로 국내 금융시장은 하락세를 보임
  - 국고채 3년물 금리는 5월 30일 2.75%에서 6월 13일 현재 2.82%로 0.07%p 상승
  - 원/달러 환율은 엔화 가격 재하락과 외국인 투자자금의 유입 감소 등으로 5월 30일 1,128.0원에서 6월 13일 현재 1,132.5원으로 4.5원 상승
  - 코스피 지수는 미국 양적완화 조기 종료에 대한 우려로 주요 선진국 증시가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5월 30일 2,000.1에서 6월 13일 1,882.7로 급락

<국내 주요 경제지표 추이>

구 분		2011	2012				2013		
		연간	1/4	2/4	3/4	4/4	1/4	5/30	6/13
실물 지표	GDP성장률(%)	3.4	2.8	2.4	1.5	1.5	1.5 <sup>p</sup>	-	-
	산업생산(%)	7.2	4.2	1.5	0.3	1.2	-1.7	1.8	-
	소비자물가(%)	4.2	3.0	2.4	2.4	1.7	1.4	1.2	1.0
	실업률(%)	3.4	3.8	3.3	3.0	2.8	3.6	3.2	3.0
	경상수지(억달러)	54.9	25.6	111.4	145.6	149.4	100.2	39.7	-
금융 지표	국고채3년물(%)	3.68	3.45	3.39	2.88	2.81	2.68	2.75	2.82
	원/달러(원)	1,083.2	1,131.3	1,152.1	1,132.9	1,090.3	1,084.8	1,128.0	1,132.5
	코스피지수(P)	2,100.7	2,014.0	1,854.0	1,900.5	1,997.1	2,004.9	2,000.1	1,882.7

주: 1) 실물지표는 전년동기대비 증감률임. 금융지표 중 국고채 3년물 금리와 원/달러 환율은 기간 중 평균값이며 코스피 지수는 기간말 기준임.

2) 실물지표 중 5월 30일은 4월, 6월 13일은 5월 수치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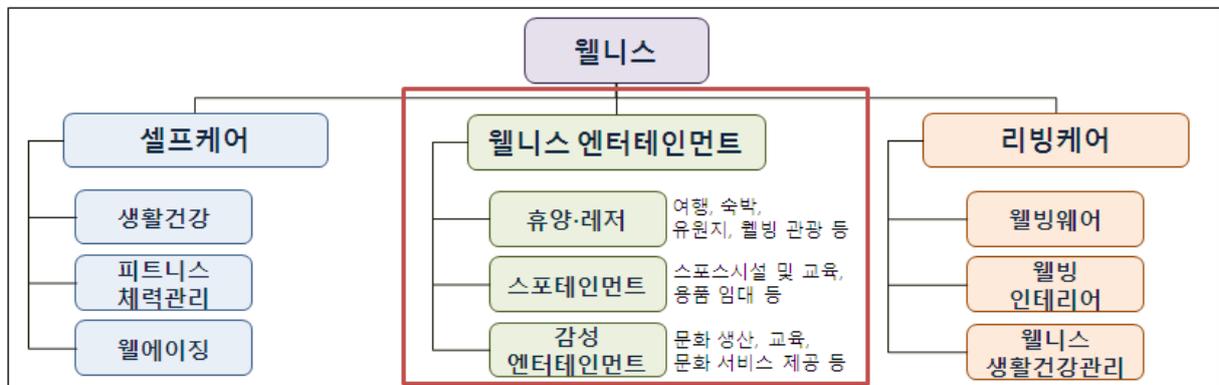
□ 산업 이슈: 웰니스 서비스 산업:

② 웰니스 엔터테인먼트 (요약)

○ 개요

- 지식경제부는 웰니스 산업을 건강 증진과 질병 예방,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요구되는 상품 및 관련 시스템의 생산, 유통으로 정의
  - Wellness: Well-being 과 Happiness 의 합성어로 건강, 의료, 미용, 문화·관광 및 오락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와 관련 제품을 포함
- 웰니스 엔터테인먼트는 관광, 스포츠, 여가 등의 분야에 대한 직·간접적인 참여 및 체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서비스 영역을 의미
  - 세부적으로는 휴양·레저, 스포테인먼트, 감성 엔터테인먼트 분야로 구분
  - 생존을 위해 반드시 요구되는 활동은 아니지만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소비자가 선택하는 서비스로서 여가 문화의 확산에 영향을 받는 산업들로 구성

< 웰니스(Wellness) 분류 >



자료: 지식경제부 R&D 전략기획단

○ 시장 성장 요인

- 한국인의 라이프스타일 및 사고방식의 변화 등에 따라 여가 활동 및 관련 지출이 증대
  - 주 5 일제 실시 이후 여가 시간 및 집 밖에서의 여가 활동이 증가하였으며, 향후 대체 휴일제 실시에 따라 관련 시장은 더욱 커질 전망

- 또한 삶의 질을 추구하고자 하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여가 생활을 위해 지출하는 비용 역시 증가
- 한국 웰니스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2012년 추정 시장 규모는 13.9조원
  - 웰니스 엔터테인먼트 중 가장 비중이 크고 성장 속도 역시 빠른 분야는 휴양.레저(2012년 비중 52.0%, 2006~2012년 연평균성장률 24.0%)
  - 한편, 공연, 게임 등을 포함한 감성 엔터테인먼트의 경우 아직 비중은 크지 않으나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유망 분야

○ 산업 트렌드 및 주요 기업 동향

- 대기업들은 휴양.레저 분야에 힐링 개념 도입한 신사업에 관심을 두는 모습
  - 제약, 식품 업체 등이 투자한 힐리언스 선마을은 휴양에 명상, 요가 등을 접목한 서비스를 제공 중이며, 삼성은 이를 벤치마킹한 힐링 캠프 조성을 추진
  - 도심의 호텔들은 기존의 식음료 및 스파 등과 숙박을 연계한 상품은 물론, 건강 검진 패키지 등 다양한 도심형 휴양 상품을 개발
- 벤처기업의 체험형 스포츠 서비스 성공으로 스포테인먼트에 대한 관심이 증대
  - 대덕연구개발특구의 벤처기업인 골프존은 스크린 골프 시장을 개척, 대중화하면서 실내 체험 스포츠의 성공 사례로 부상
  - 이는 닌텐도의 Wii, 마이크로소프트의 Kinect, 소니의 PS Move 등 가정용 게임기 및 스포츠 간 결합 및 확장의 개념으로 중소기업들의 진출이 진행 중

## □ 경제 이슈: 창조경제의 성공은 창조산업 육성부터

### - 국내 창조산업의 신성장동력 가능성 평가

#### ○ 창조산업의 개념 및 분류

- 신정부 들어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가 국정 최우선 과제로 선정됨에 따라 창조경제 뿐 아니라 관련 산업 즉, 창조산업이 신성장동력으로서 주목받고 있다. 신성장동력이란 특정 시점의 주력 성장산업을 대체하는 미래 주력산업을 말하는데, 이는 신기술, 신제품, 신서비스 및 이들 간 융합으로 이루어진 산업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일국 경제의 지속성장 기반이 된다. 국내 창조산업은 ICT, SW 및 과학기술 융합 관련산업을 포함한 협의의 개념을 기반으로 한국은행 산업연관표 상 분류 가능한 세부산업에 따라 분류하면 광고, 건축, 예술, 공예, 패션, 출판, 소프트웨어 등 정보관련산업, 영상 및 오디오, 오락, R&D, ICT기기의 11개 분야로 구분할 수 있다.

#### ○ 국내 창조산업의 신성장동력 가능성 평가

- 국내 창조산업의 신성장동력화 가능성에 대해 성장 속도, 부가가치유발효과, 고용유발효과, 생산성 등 4가지 측면에서 전산업과 비교·분석해 본 결과, 신성장동력이 될 수 있는 잠재력이 내재되어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첫째, 성장 속도 면에서 국내 창조산업은 전산업에 비해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국내 창조산업 규모는 2005년 부가가치 기준 58.8조 원에서 2011년 87.6조 원으로 연평균 6.9%씩 증가하였는데, 이는 전산업 연평균 증가율 6.1%보다 빠른 수준이다. 둘째, 부가가치유발효과 면에서 국내 창조산업은 전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 국내 창조산업의 부가가치 유발계수는 2011년 기준 0.694로 전산업 0.633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셋째, 고용유발효과로 볼 때도 국내 창조산업은 전산업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2011년 기준 최종수요 10억 원당 취업유발계수는 전산업 13.4명으로 전산업 12.3명에 비해 높다. 넷째, 생산성 측면에서도 국내 창조산업의 생산성이 전산업보다 높다. 취업자 1인당 부가가치는 전산업이 2011년 5,850만 원인데, 창조산업은 6,350만 원으로 전산업 대비 약 500만 원 높다.

#### ○ 국내 창조산업의 미흡한 점

- 국내 창조산업이 신성장동력으로서 충분한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을 극복할 필요가 있다. 첫째, 창조산업이 국내 경제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이 다소 약화되고 있다. GDP 대비 창조산업 부가가치는 2008년 7.5%에서 2011년에 7.1%로 하락하였고, 전산업 취업자 대비 비중도 2011년 6.6% 수준으로 정체되고 있다. 둘째, 국내 창조산업은 특정 산업에 집중되어 불균형 성장을 보이고 있다. 2011년 기준 전체 창조산업 부가가치의 73.8%, 취업자 수의 65.3%가 소프트웨어 등 정보관련 산업, R&D, ICT기기 등의 3개 산업에 집중되어 있다. 셋째, 국내 창조산업 내 산업 간 생산성 격차가 존재한다. 광고산업의 취업자 1인당 부가가치는 약 2,770만 원에 불과한데 ICT기기 산업은 9,230만 원으로 3.3배 차이가 있는 등 산업 간 격차가 존재한다. 넷째, 국내 창조산업 내 산업 간 부가가치 및 고용 유발효과에 격차가 존재하고, 특정 산업은 전산업 평균에 다소 미치지 못한다. 부가가치 유발계수가 가장 높은 산업은 건축으로 2011년 0.902이나, ICT기기는 0.441에 불과하다. 패션, ICT기기의 부가가치 유발계수는 각각 0.507, 0.441로 전산업 평균 0.633보다 낮다. 최종수요 10억 원당 고용유발효과는 R&D가 19.8로 가장 높지만, ICT기기 6.5명으로 R&D의 1/3 수준이다. 더욱이, 패션, 소프트웨어 등 정보관련산업, ICT기기는 전산업 평균에 못 미친다.

#### ○ 시사점

- 창조산업의 신성장동력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 달성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 대안이 추진되어야 한다. 첫째, 지속적인 고부가가치화와 관련 분야 고용 지원 강화를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해야 한다. 둘째, 창조산업 중 가장 규모가 큰 R&D와 소프트웨어 등 정보관련 산업을 창조산업 내 융합 엔진으로 활용해야 한다. 셋째, 창조산업 내 산업 부문별 불균형 성장 개선 노력이 시급하다. 넷째, 국내 창조산업의 영세성 극복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다섯째, 창조산업 관련 통계의 일관성을 갖도록 하고 미비한 통계를 보완함으로써 창조산업 육성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생성이 꼭 필요하다.

현대경제연구원 이부형 수석연구위원 (2072-6306, leebuh@hri.co.kr)

정민 선임연구위원 (2072-6220, chungm@hri.co.kr)

□ 이슈: 고령화 사회에 대한 인식과 대응  
: 고령화 사회, 6년 더 일하고 싶다

**초고령화 사회로의 진입**

- 노년층의 꾸준한 증가에도 불구하고 노년층에 대한 고용 현황은 상대적으로 열악하여 생활 여건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는 의견이 많이 제기됨
- 따라서 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른 고령자 문제에 대해 정확하게 분석함으로써 향후 고령자에 대한 정책 방향성에 대해 가능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

**대한민국, 노후가 위험하다**

<b>고령화사회에 대한 국가적 준비 부족</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리나라의 고령화 사회 진입에 대해 걱정하는 국민이 10명 중 9명(87.1%)</li> <li>- 고령화 사회에 대한 국가 차원의 준비가 부족하다는 의견 다수(59.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젊은 세대(20대;70.1%, 30대;64.6%)일수록 준비 부족을 좀 더 많이 인식</li> </ul> </li> <li>- 특히, 전체 국민의 83.2%는 고령자 문제에 대한 준비 부족 우려</li> </ul>
<b>고령화사회. 위험한 노후</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령화 사회, '6년은 더 일하고 싶다'(노후 고용갭 6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희망은퇴시점은 평균 약 63세이나 예상은퇴시점은 평균 약 57세로 인식되고 있어, 일하고 싶어도 일하지 못하는 6년 정도의 격차 발생</li> </ul> </li> <li>- 노후 생활비, '매달 24만원 정도 부족하다'(노후 소득갭 24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노후적정생활비는 매달 180만원 정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지만 노후 예상수입은 156만원에 불과하여, 약 24만원 정도의 노후 소득 격차 발생</li> <li>· 저소득층(200만원 미만)의 경우 노후 소득갭(약 33만원)이 좀 더 크게 발생</li> </ul> </li> <li>- 노후 예상 수입원으로 개인연금(39.6%)이 가장 주요 수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노후 준비를 위한 월지출액은 전체 평균 약 31만원 정도임</li> </ul> </li> </ul>

**고령화 사회에 대한 국가적 준비 필요**

- 고령화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고령자에 대한 국가의 복지 지원이 가장 필요
  - 고령자 복지 지원(37.4%), 고령자 고용 문제 해결(31.4%) 순서
- 특히, 고령자 고용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고령자에 적합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우선
  - 새로운 일자리 창출(46.7%), 비정규 고령자의 고용 안정 노력 필요(21.1%) 순서
- 정년연장은 임금피크제와 연계해서 실시해야 한다고 인식
  - 국민 10명 중 6명(57.9%)은 정년연장 법안이 본인에게 도움된다고 응답
  - 임금피크제와 연계(78.3%)해야 하며, 임금수준은 기존 임금의 약 65% 정도를 원함
- 정년연장 성공하기 위해서 정부의 적극적 기업 지원(37.9%)이 가장 필요

**시사점**

- ① 고령자 고용을 위해 정년 연장 기간을 점차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장기적 로드맵 마련
- ② 고령자 복지 지원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노후에 발생하는 소득갭을 최소화시켜야 함
- ③ 정년연장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임금피크제와의 연계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가이드라인 제시 필요

□ 초고령화 사회로의 진입

○ 2000년 고령인구 비율이 7%대를 넘어선 우리나라는 초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을 앞두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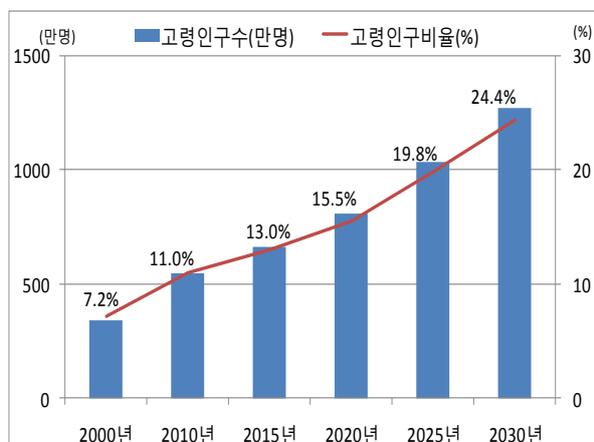
- 우리나라의 경우 2017년 고령인구가 14%를 넘어 고령사회, 2026년은 고령인구가 20%를 넘어 초고령사회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됨

○ 특히, 우리나라의 고령화 진행 속도는 일본 등 주요국의 고령화 진행속도에 비해 매우 급격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 미국의 경우 1942년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이후 2015년 고령사회, 2036년 초고령 사회로 전환되어, 고령화 사회 이후 초고령사회로 진행되는 기간이 94년 정도 예상됨
- 이미 2006년 고령사회로 진입한 일본의 경우 고령화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전환되는 속도가 36년 정도 예상되는 반면, 우리나라는 26년으로 매우 짧음

○ 급격한 고령화 진행으로 인해 2035년에는 청년 2 명이 노인 1 명을 부양해야 하는 등 고령인구 증가에 따른 복지 등 여러 분야에서 문제점이 노출됨

<우리나라 고령화 추이 및 전망>



<주요국의 고령화 진행 속도 비교>

	고령화 (7%)	고령 (14%)	초고령 (20%)	진행속도 (7→20%)
한국	2000년	2017년	2026년	26년
일본	1970년	1994년	2006년	36년
미국	1942년	2015년	2036년	94년

자료 : 통계청

○ 고령화 사회와 노후 걱정

- 우리나라가 고령화 사회로 빠르게 진입하면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노년층의 노후 생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
  - 한국의 노인 빈곤율이 OECD 선진국에 비해 매우 높으며 경제 규모에 비해 노년층 복지에 지출되는 비용 역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 특히, 노년층의 꾸준한 증가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고용 현황은 상대적으로 열악하여 생활 여건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는 의견이 많이 제기됨
  - 노년층의 기대수명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지만, 정작 이들이 일할 수 있는 여건은 거의 마련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우리나라 60 대(60-64 세)의 고용률 역시 2012 년 기준 56.1%로 70% 이상인 다른 연령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이 낮아 최소한의 생계유지 수단 마련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가 많음
- 따라서 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른 고령자 문제에 대해 정확하게 분석해야 할 필요가 있음
  - 이는 향후 고령자에 대한 복지와 고용 정책의 방향성에 대해 가능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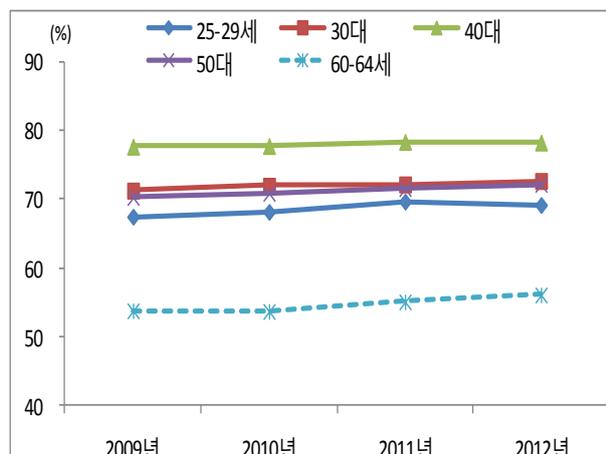
<OECD 주요국의 노인복지지출 비교>

(단위: GDP 대비 %)

	2005	2006	2007	2008	2009
한국	1.5	1.6	1.6	1.9	2.1
프랑스	10.9	11.0	11.1	11.5	12.3
독일	9.1	8.8	8.5	8.5	9.1
일본	8.6	8.7	8.8	9.3	10.4
영국	5.9	5.7	5.7	6.2	6.7
미국	5.3	5.2	5.3	5.5	6.1
OECD 평균	6.6	6.5	6.4	6.6	7.3

자료 : OECD

< 국내 연령별 고용률 >



자료 :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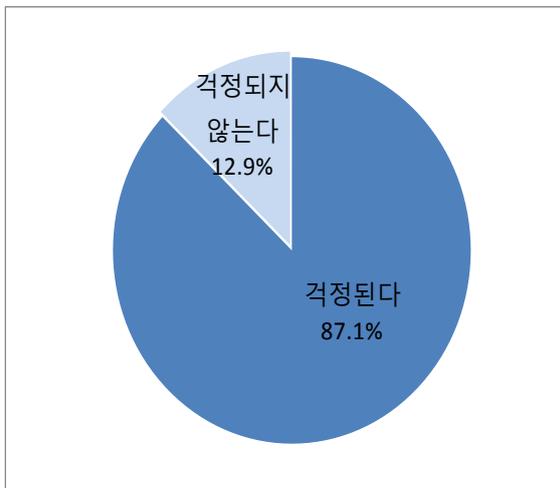
□ 대한민국, 노후가 위험하다

1) 고령화 사회에 대한 국가적 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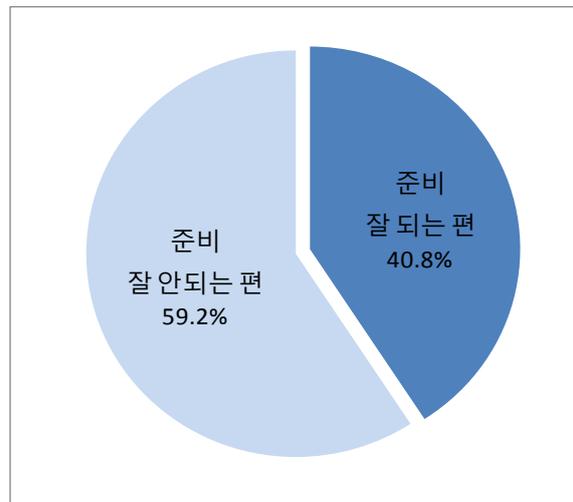
○ 고령화 사회에 대한 국가 차원의 준비가 부족하다

- 국민 10명 중 9명은 우리나라의 고령화 사회로 진입에 대해 걱정을 함
  - '우리나라가 고령화 사회로 급속하게 전환되는 것에 대해 걱정이 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87.1%의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다고 응답함
- 우리나라의 고령화 사회로의 전환에 대한 국가 차원의 준비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좀 더 많음
  - '우리나라의 고령화 사회로의 전환에 대해 국가 차원에서 어느 정도 대비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59.2%가 대비하고 있지 않다고 응답

<고령화사회 진입에 대한 걱정>



<고령화사회에 대한 국가적 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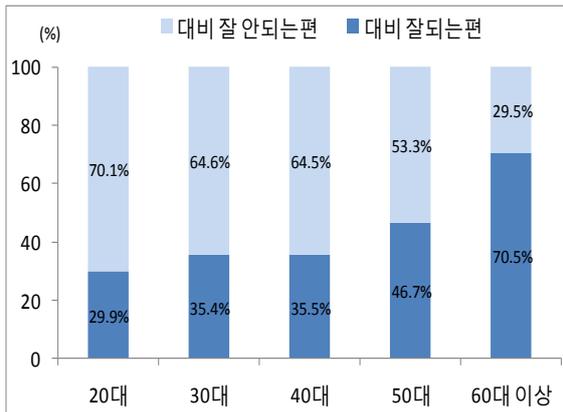
주) 현대경제연구원 2013년 5월 설문조사

- 연령이 낮을수록 우리나라의 고령화 사회에 대한 준비가 부족하다는 의견을 좀더 많이 표명함
  - 20 대의 경우 70.1%, 30 대는 64.6%, 40 대는 64.5%, 50 대는 53.3%가 고령화 사회에 대한 국가적 준비가 부족하다고 평가함
  - 반면, 60 대 이상은 70.5%가 우리나라의 고령화사회에 대한 국가적 준비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응답함
- 소득수준별로 살펴보면, 200만원 미만의 저소득층의 경우 고령화 사회에 대한 국가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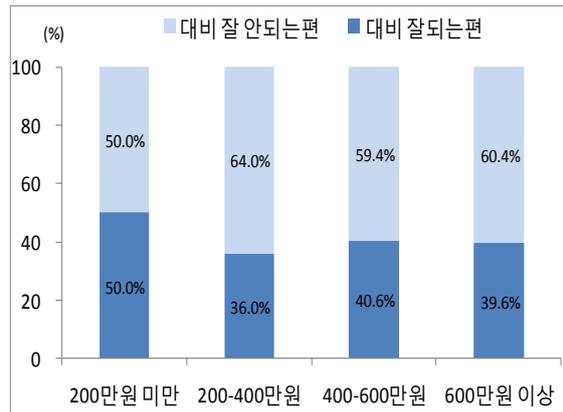
준비가 잘되고 있다는 의견이 정확히 50%로 나타남

- 반면, 다른 계층에서는 고령화 사회에 대한 국가적 대비가 잘 안된다는 응답이 좀 더 높게 나타남

<고령화사회 준비(연령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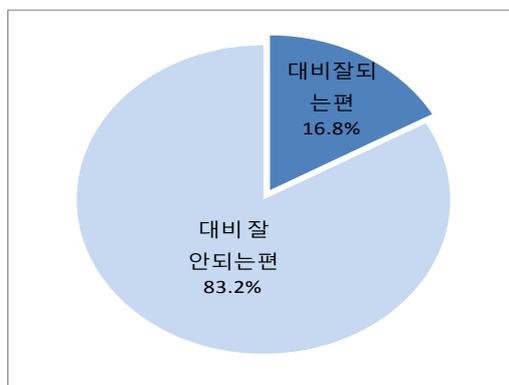
<고령화사회 준비(소득수준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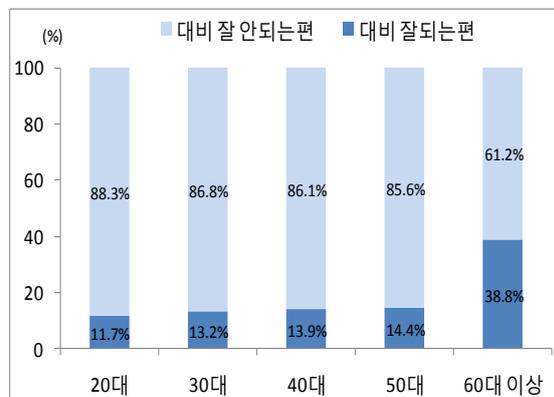
○ 특히, 고령자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적 준비가 부족하다

- 노년층의 증가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고용 등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국가적 준비도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음
- '증가되는 고령자의 고용, 건강 등 고령자 문제에 대한 준비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83.2%가 잘 준비되고 있는 않는 편이라고 응답함
- 연령별로 살펴보면, 20대에서 50대까지 고령자 문제 해결을 위한 대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다는 의견이 매우 많은 반면, 60대 이상의 경우 다른 연령층에 비해 대비가 잘되고 있다는 의견이 상대적으로 높음

<고령자 문제 해결을 위한 대비>



<고령자 문제 해결(연령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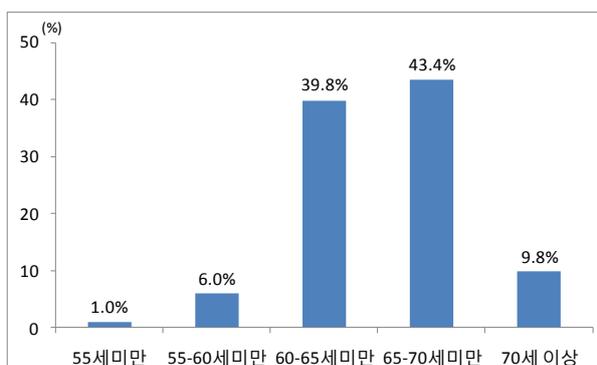


2) 대한민국, 노후가 위험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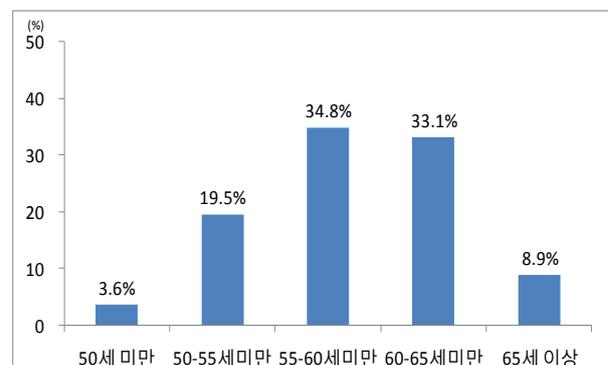
○ (노후 고용갭) 노후에 일을 하고 싶지만 일할 수 없는 기간 6년

- 우리나라 국민들이 원하는 희망은퇴시점은 65세-70세 미만이 가장 많음
  - 희망은퇴시점은 65 세-70 세 미만이 43.4%로 가장 많았고 60 세-65 세 미만도 39.8%를 차지했으며, 10 명 중 1 명(9.8%)은 70 세 이상 일하고 싶다는 의견을 나타냄
- 우리나라 국민들이 노동 현실을 감안할 때 예상하는 예상은퇴시점은 55세-60세 미만이 가장 많음
  - 예상은퇴시점은 55 세-60 세 미만이 34.8%로 가장 많았고, 60 세-65 세 미만에 은퇴할 것으로 예상하는 사람도 33.1%를 차지했음
  - 한편, 65 세 이상까지 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는 사람은 8.9%이었지만 55 세 미만까지만 일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23.1%를 차지함

<국민들의 희망은퇴시점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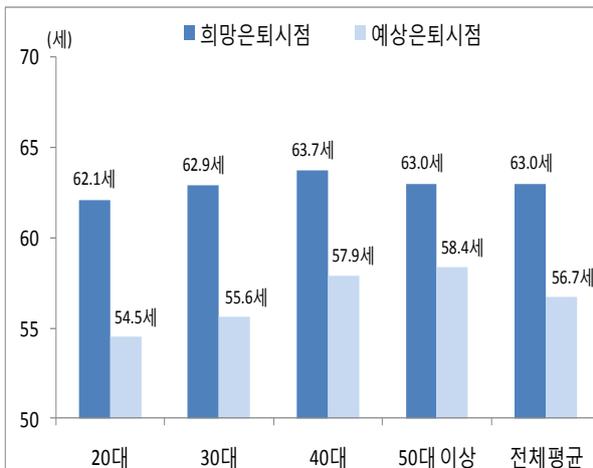
<국민들의 예상은퇴시점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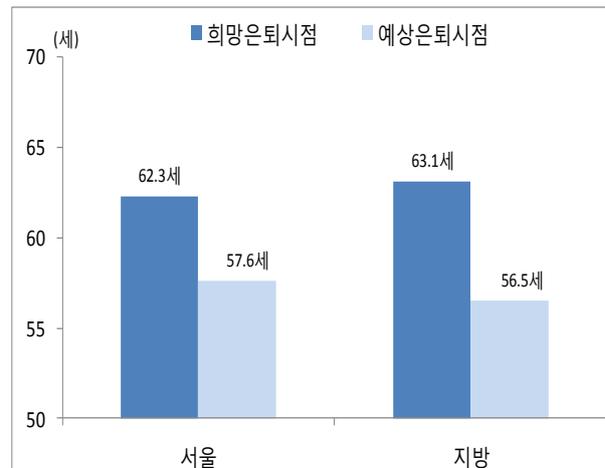
- 따라서 희망은퇴시점의 전체 평균은 약 63세이나 현실을 감안한 예상은퇴시점의 평균은 약 57세로 인식되고 있어, 일을 하고 싶지만 일을 할 수 없는 고용갭이 6년 정도 발생할 것으로 추정됨

- 연령별로는 50 대 이상의 고용갭(약 5 년)이 적은 편이고, 20 대의 고용갭(약 8 년)이 상대적으로 큰 편임
- 지역별로는 서울의 고용갭은 약 5 년인 반면, 지방의 고용갭은 약 7 년으로 지방의 고용갭이 훨씬 크게 나타남

<연령별 평균 노후 고용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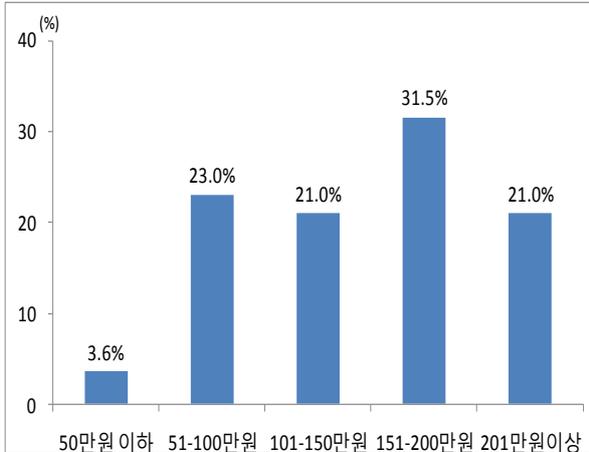
<지역별 평균 노후 고용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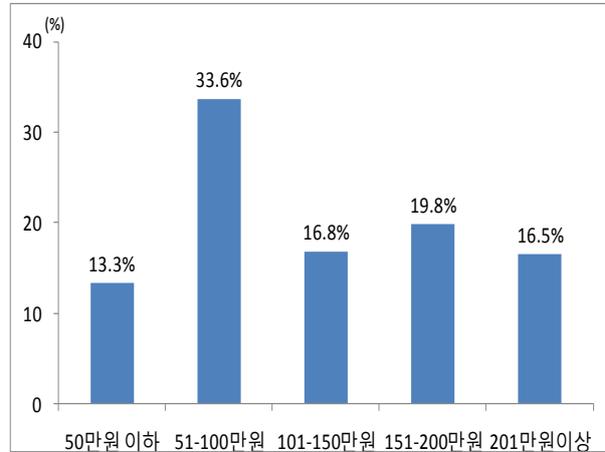
○ (노후 소득갭) 적정한 노후 생활을 유지하는데 부족한 비용 24 만원

- 우리나라 국민들은 노후적정생활비로 151만원-200만원을 가장 많이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노후적정생활비는 151 만원-200 만원이 31.5%로 가장 많았음
  - 그 이외에 51 만원-100 만원 23.0%, 200 만원 이상 21.0%, 101 만원-150 만원 21.0% 순서로 나타남
- 우리나라 국민들은 자신의 상황을 감안할 때 노후 예상수입액으로 51만원-100만원을 가장 많이 생각하고 있음
  - 노후예상수입액은 51 만원-100 만원이 33.6%로 가장 많았음
  - 그 이외에 151 만원-200 만원 19.8%, 101 만원-150 만원 16.8%, 200 만원 이상 16.5% 순서로 나타남

<노후 적정 생활비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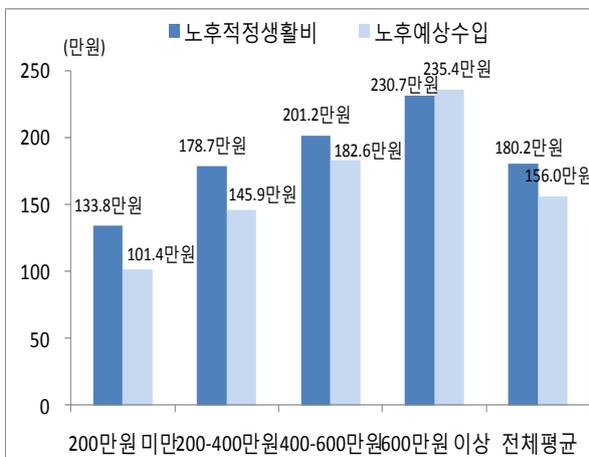


<노후 예상 수입액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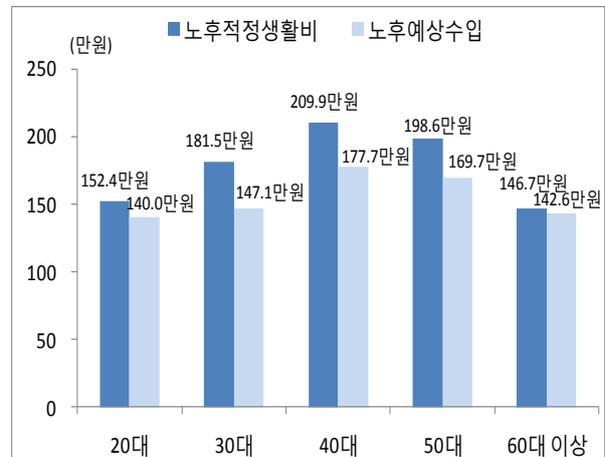


- 조사 결과 전체적으로 노후적정생활비의 평균은 약 180만원 정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지만 현실을 감안할 때 노후예상수입액은 약 156만원에 불과하여, 약 24만원 정도의 소득갭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됨
- 소득수준별로는 600 만원 이상 고소득층의 경우 노후예상수입(235.4 만원)이 노후적정생활비(230.7 만원)를 초과할 것으로 판단됨
- 반면, 200 만원 이하 저소득층의 경우 노후적정생활비(133.8 만원)가 노후예상수입(101.4 만원)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어 약 33 만원의 소득갭이 발생
- 연령별로는 30 대와 40 대의 소득갭이 가장 크게 나타날 것으로 판단됨

< 소득수준별 평균 노후 소득갭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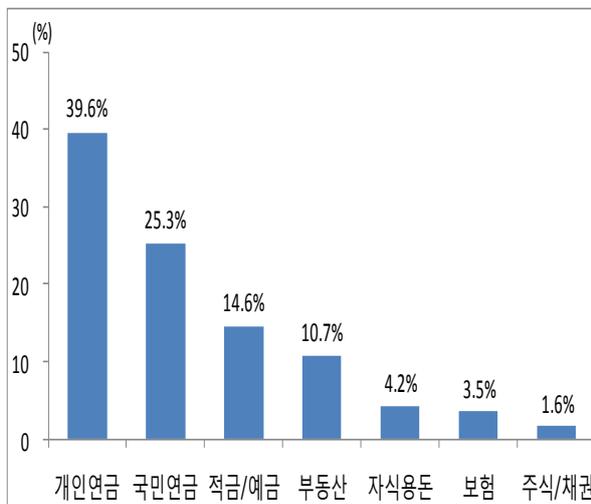
<연령별 평균 노후 소득갭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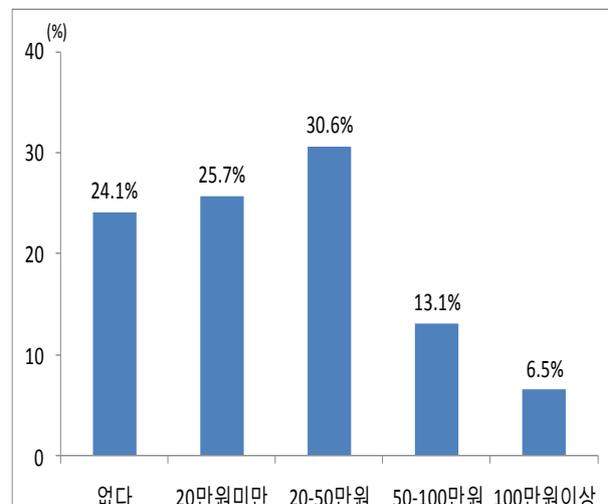
○ 노후 초수입원은 개인연금

- 노후에 예상하고 있는 주요 수입원으로 개인연금을 가장 많이 선택함
  - '노후생활에 필요한 가장 중요한 수입은 어디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개인연금 39.6%, 국민연금 25.3%, 적금과 예금 14.6%, 부동산 수익 10.7% 순으로 응답함
  - 자식 등의 용돈이 노후에 예상되는 주요 수입원이라고 응답한 사람들도 4.2%나 되고, 특히 60대 이상의 경우 19.6%나 됨
- 한편, 노후 준비를 위한 월지출액은 평균 약 30만원 정도로 나타남
  - '자신의 노후 대비를 위해 연금이나 저축 등에 드는 돈은 한달에 어느 정도입니까'라는 질문에 20-50만원 미만 30.6%, 20만원 미만 25.7%, 50-100만원 미만 13.1%, 100만원 이상 6.5% 순으로 응답함
  - 노후 준비를 위한 월지출액이 전혀 없다는 응답도 24.1%나 되며, 특히 200만원 이하 저소득층의 42.9%는 전혀 준비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노후 예상 주요 수입원>



<노후 준비를 위한 월지출액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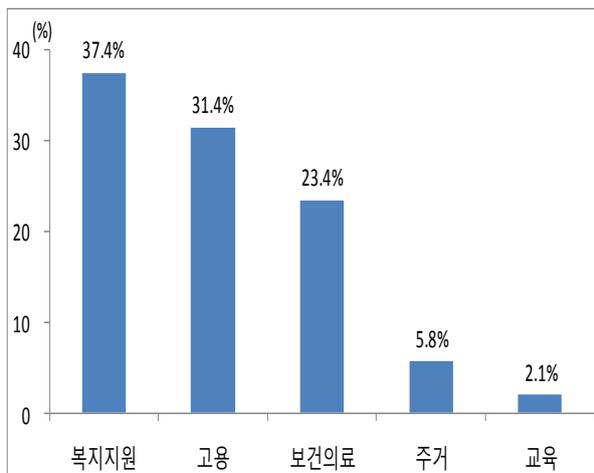
□ 고령자 문제 해결 방안

1) 고령자를 위한 국가적 준비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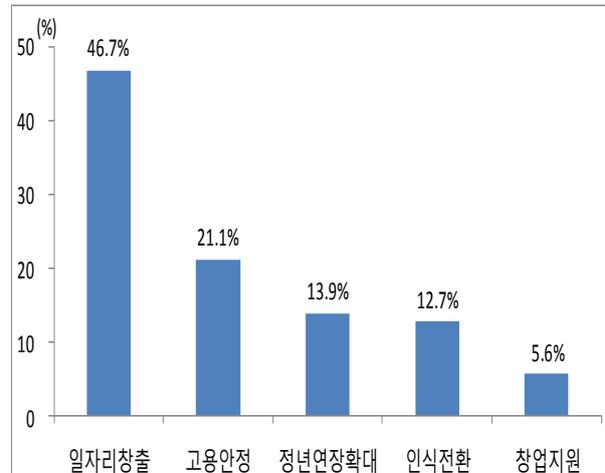
- 노후에 발생할 수 있는 고용갭과 소득갭 극복을 위해서는 고령자를 위한 국가의 복지 지원과 고용 문제 해결이 가장 필요함

- '점차 증가하는 고령자를 위해 국가가 어느 분야의 문제점 해결에 가장 우선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고령자 복지 지원 37.4%와 고령자 고용 문제 31.4%가 비교적 높게 나타남
- 그 외에는 고령자 보건의료 문제 23.4%, 고령자 주거 문제 5.8%, 고령자 교육 문제 2.1% 등의 순서로 나타남
- 특히, 고령자의 고용 문제 해결을 위해 가장 필요한 방안은 고령자에게 적합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라고 인식됨
- '고령층의 고용 문제 해결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고령자를 위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46.7%로 가장 높게 나타남
- 그 외에는 비정규 고령자에 대한 고용 안정 노력 21.1%, 정년 연장 기간 확대 13.9%, 고령 노동자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인식 전환 노력 12.7% 등의 순서로 나타남

<고령자를 위한 우선 지원 분야>



<고령자 고용을 위한 지원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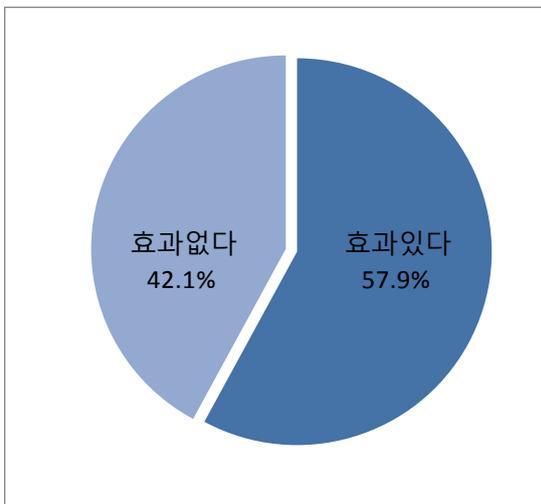
## 2) 정년 연장 관련 이슈

### ○ 정년 연장 법안 효과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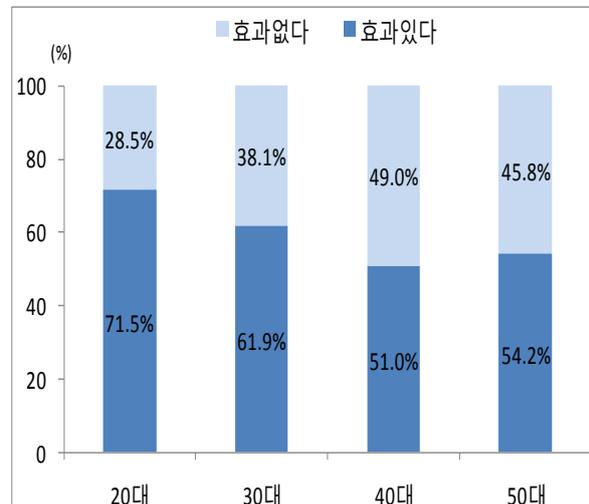
- 국민 10명 중 6명은 정년연장 법안이 본인에게 효과가 있다고 인식
- '60 세 정년연장 법안이 본인에게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서 국민의 57.9%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응답함

- 젊은 세대의 경우 정년연장 법안이 오히려 자신들에게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좀더 많이 생각함
  - 연령별로 살펴보면, 20 대는 71.5%, 30 대는 61.9%, 40 대는 51.0%, 50 대는 54.2%가 정년연장이 본인에게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음
  - 따라서 젊은 세대가 청년 실업 증가 우려로 인해 정년 연장 법안을 반대할 것이라는 의견은 우려에 불과하며 젊은 세대 역시 정년 연장 법안의 효과에 대해 긍정적인 것으로 판단됨

<정년연장법안 효과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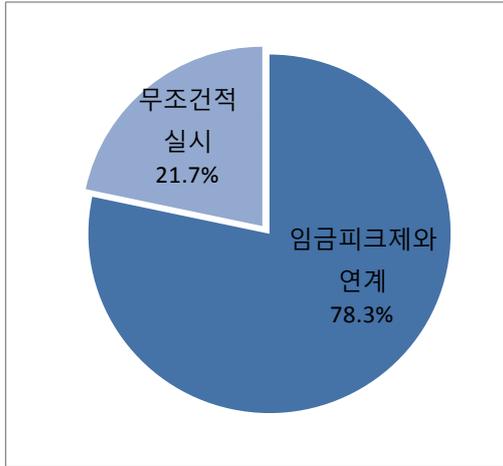
<정년연장법안 효과성(연령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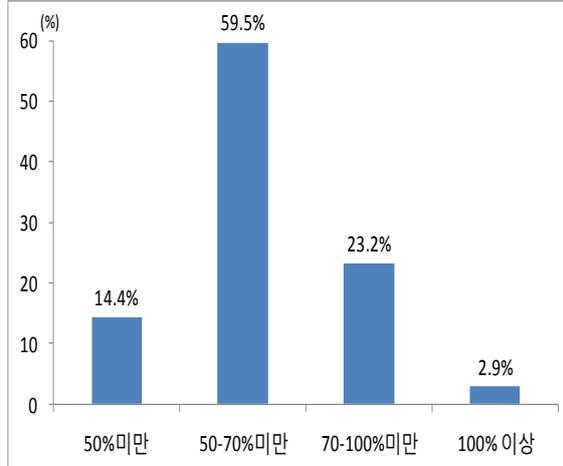
○ 정년 연장은 임금피크제와 연계되어야

- 정년연장은 임금피크제와 연계해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 많음
  - '정년연장과 연계하여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것에 찬성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국민의 78.3%가 기업부담 감소를 위해 정년연장을 임금피크제와 연계하여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함
- 임금피크제를 실시할 경우 임금수준은 기존임금의 50-70%가 적당하다는 응답이 59.5%로 가장 높게 나타남

<임금피크제와의 연계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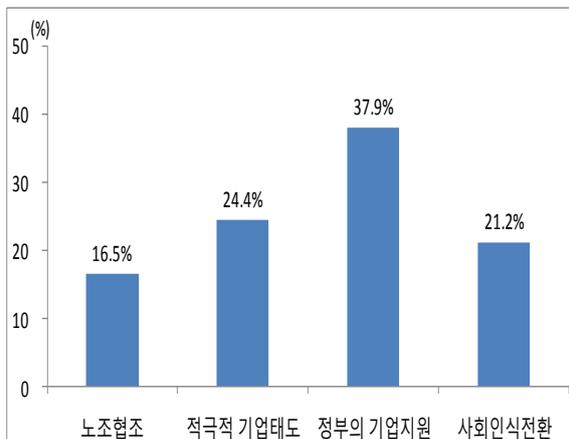
<임금피크제하의 임금수준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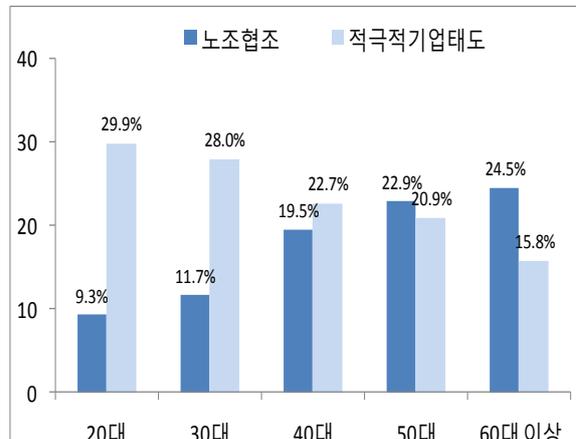
○ 정년연장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는 정부의 기업 지원이 가장 필요

- 성공적인 정년연장 제도의 정착을 위해서는 정부의 기업에 대한 적극적 지원이 가장 필요하다고 인식됨
- '정년연장이 성공적 정착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정부의 기업에 대한 적극적 지원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37.9%로 가장 높게 나타남
- 그 외에도 고령자에 대한 기업의 긍정적 태도 형성 24.4%, 고령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전환 21.2%,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노조의 협조 16.5%의 순서로 나타남
- 한편, 연령별로 살펴보면 20대와 30대는 기업의 적극적 역할을, 50대 이상은 노조의 협조를 좀 더 강조하고 있음

<정년연장의 성공을 위한 방법>



<정년연장의 성공 방법(연령별)>



□ 시사점

○ 첫째, 노후에 발생할 수 있는 고용갭 극복을 위해 정년 연장 기간을 점차 확대할 수 있도록 장기적 로드맵을 마련해야 함

- 고령화 사회가 본격화될수록 일을 하고 싶어도 일을 할 수 없는 고령자가 많아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들을 위해 장기적인 정년연장 로드맵을 마련해야 함
- 일본 등 선진국의 경우 정년연장이 65 세 이상인 경우가 많으므로, 우리나라도 이에 걸맞는 장기 프로그램을 미리 준비해야 함
- 특히, 설문 조사 결과에서 보듯이 우리나라의 경우 노후에 발생할 수 있는 고용갭이 약 6년 정도인 점을 감안하여 이를 극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 둘째, 고령자 복지 지원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노후에 발생하는 소득갭을 최소화시켜야 함

- 개인적으로 노후를 준비하기에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으므로 국가 차원에서 적극적인 복지 지원 대책 마련 등을 통해 노후 사각지대를 충분히 보충해야 함
- 고소득층과 달리 저소득층의 경우 노후에 소득갭이 좀 더 크게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들을 겨냥한 맞춤형 복지 지원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셋째, 정년연장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임금피크제와 연계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가이드 라인 제시가 필요함

- 60세 정년연장 법안이 통과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정년 연장이 효과를 기대하고 있으므로 이를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 정년연장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는 정부, 기업, 노조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협조가 필요함
- 다만, 많은 국민들이 정년연장 제도와 임금피크제를 연계하여 실시하기를 바라고 있으므로 정부는 임금피크제를 위해 가이드라인을 신속히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필요가 있음

현대경제연구원 산업연구본부 장후석 연구위원 (chahus@hri.co.kr, 02-2072-6234)

□ 洗心錄

□ 감정 온도를 낮춰라

우리는 '욕'하는 감정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해 극단적인 결과를 낳는 상황을 흔하게 보고 있다. 나와 상대방 사이에 분노, 두려움, 좌절감 등 부정적 감정이 격해질 경우 예측 불가능한 어떠한 행동이 나올지 모른다.

그 누구도 감정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그런데 부정적 감정이 강하게 형성되면 창조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게 된다. 또한 행동 통제력을 잃어 나중에 후회할 일을 많이 만든다. 그래서 감정을 유발하는 원인이 무엇이든, 현재 유발된 감정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파악할 필요가 없다. 당장 감정이 격해지지 않도록 현재 감정 상태를 인식해야 한다. 자신의 현재 감정온도를 측정해보고 감정이 부글부글 끓어오르지 않도록 통제하는 것이다. 다음 세 가지 감정 상태의 질의 응답에 따라 나 자신이 현재 어느 정도의 감정온도에 있는지 측정해 보라. (자료: 다니엘 샤피로, *□원하는 것이 있다면 감정을 흔들어라*, 2013.5)

- 현재 내 감정 상태를 인식하고 있으며 제어할 능력이 있다면, 감정온도는 '통제 가능한 온도'에 있다.
- 현재 내 감정이 너무 뜨거워 곧 통제 불능 상태에 이를 것 같다면, 감정온도는 '펄펄 끓기 시작하는 비등(沸騰) 온도'에 있다.
- 상대방에게 하지 말아야 할 말을 이미 하고 있다면, 감정온도는 '통제 불가능한 온도'에 있다.

감정이 자신을 통제하게 내버려두지 말고 나 자신이 감정을 통제해야 한다. 감정을 진정시키지 않는 한 현명한 결정을 내린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본인들 스스로 차분하게 마음을 가라앉힐 방법을 터득해야 한다. 상대방과의 사이에 좋은 감정을 느껴야만 서로간에 감정적 유대감을 형성하게 되고, 그래야 자신이 목표로 하는 것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화가 날 때는 말하기 전에 10 까지 세라.**

**매우 화가 날 때는 100 까지 세라”**

토머스 제퍼슨 (1743~1826) : 미국의 정치가, 교육자, 철학자

## □ Book Review

### □ 도서 및 저자 소개

- 제목: 지금 당장 이 불황을 끝내라 (End this depression now)

- 저자: 폴 크루그먼 (Paul Krugman)

- 2008년 노벨경제학상 수상
-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 위원, 예일대학교, 스탠퍼드대학교 및 MIT 경제학 교수 역임
- 2005년에 “부동산 거품이 세계 경제의 불균형을 심화시킴으로써 2006년에서 2010년 사이에 위기가 올 수 있다”고 예언
- 저서: “폴 크루그먼 새로운 미래를 말하다”, “불황의 경제학”, “대폭로”, “경제학의 향연”, “기대감소의 시대” 등

### □ 주요 내용

○ 현재의 경기침체는 본질적으로 불가피한 것이 아니며 정부가 재정지출을 확대함으로써 훨씬 더 쉽고 빨리 끝낼 수 있음

- 총수요 부족으로 인한 성장을 둔화와 실업률 상승은 정부가 지출을 확대함으로써 빠른 해결이 가능
- 다만 정치적 의지의 부족이 재정지출 확대를 통한 경기회복을 가로막고 있으며 정부의 과감한 리더십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

○ 금융위기 이후 연방준비제도이사회는 본원통화를 늘리는 방식으로 위기에 대응하였으나, 제로금리로도 경기침체를 회복시키지 못하는 ‘유동성 함정’에 빠짐

- 연준이 은행들을 통해 통화량을 확대하면서 ‘유동성의 가격’인 금리는 2007년 말부터 하락하기 시작했고, 2008년 말에는 제로(zero) 수준까지 하락
- 하지만 이는 주택시장의 붕괴를 억제하기에는 역부족이었고, 부동산경기 급락과 더불어 소비지출은 바닥을 칩
- 기업들은 매출증가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투자를 중단했고 그 결과 고용도 감소하면서 실업률이 급격히 높아짐

- **미국 정부는 신속한 경기부양책을 펼쳤으나 경기침체로 인한 대량의 실업사태를 해결할 만큼 충분하지는 않았음**
  - 2008년 미국경제가 급속한 침체국면으로 빠져들기 시작하자 2009년 1월에 취임한 오바마 행정부는 7,870억 달러 규모의 미국경기부양법안을 발표
  - 처음부터 정부의 경기부양책을 반대하던 학자와 정치인들은 재정적자에 대한 우려로 재정지출 삭감을 주장
  - 2009년 가을로 접어들면서 초기 경기부양책의 규모가 부족했다고 경고했던 사람들의 말이 옳았던 것으로 드러남
  - 실업문제가 실질적으로 치명적인 피해를 야기하고 있는 반면, 현재와 같은 경기침체기에 재정적자가 미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대부분 가상적인 것에 불과
  
- **긴축재정 옹호론자들은 국채 발행이 이자율 상승과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지금과 같은 '유동성 함정'의 상황에서는 사정이 다름**
  - 경제가 완전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정부의 국채 발행은 이자율을 끌어올리게 되며, 이것은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음
  - 그러나 제로 금리 상황에서도 민간소비 부족으로 저축의 과잉공급이 나타나는 유동성 함정의 경우에는 정부가 자금 확보를 위해 민간분야와 경쟁을 벌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차입의 증가(국채 발행)로 인해 금리가 높아지지 않음
  
-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일시적으로 정부지출을 확대해야 하며, 향후 5~10년 동안 3~4%의 인플레이션도 감내할 필요가 있음**
  - 최근 미국경제의 회복 조짐이 나타나고 있으나 아직 미미한 수준이며, 경기침체는 현재도 지속적이고 누적적으로 미국 사회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
  - 주 정부의 파괴적인 긴축재정을 뒤집는 것만으로도 경기회복과 실업률을 낮추어 미국경제에 엄청난 자극을 줄 수 있음
  - 주택 채용자 프로그램과 같은 부채 구제 방안을 대폭 완화하여 주택소유자들이 소비를 위한 자금을 마련하도록 도와줌으로써 이들이 경기회복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 정부지출 증가가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것이 사실이므로, 일시적으로 정부지출을 확대해서 지금 당장 이 불황을 끝내야 함

# HRI Leaders Forum

최고CEO와 으뜸 지성의 만남

HRI 리더스포럼은  
CEO들을 위한 프리미엄급  
최고경영자 포럼입니다.

## [HRI리더스포럼 혜택]

- 경제·경영부터 인문사회에 걸친 다양한 주제강연
- CreativeTV(usociety.co.kr)VIP멤버십 제공
- 경제·경영도서 베스트셀러 제공(年 12권)
- 최신 경제산업 동향자료
- 리더십교육프로그램 참여기회 마련
- 경제핫이슈분석 다운로드 서비스 제공

## [연회비]

- 1명 : 연100만원 ■ 3명 : 연200만원 ■ 5명 : 연300만원

일정

매월 넷째주 목요일  
저녁 7시

장소

플라자호텔 22층  
다이아몬드홀

시간

19:00~21:00(2h)

### HRI리더스포럼에 지혜를 나눠준 연사

김난도 서울대 교수(대한국소비트렌드의 최근 흐름과 시사점), 최재천 이화여대 교수(21세기 기업생태계와 지식의 통섭), 유홍준 명지대 교수(명작의 조건과 장인정신), 금난새 지휘자(하모니리더십), 김정운 명지대 교수(마음을 움직이는 힘)



HRI리더스포럼 사무국

· Tel. 02-2072-6246, 6247 · Fax. 02-2072-6249 · E-mail, forum@hri.co.kr

 **현대경제연구원**  
http://www.hri.co.kr